

'14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해설

한국경찰학원 이상훈 교수

1. 다음 보기 중 경찰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 ㉡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 작용의 성질에 관계없이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한 개념으로 경찰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권력적·비권력적 작용)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에 관계없이 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권력적 작용(명령·강제)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경찰조직이 명령·강제와 같은 권력적 작용을 하는 경우 두 작용이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두 작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2. 다음은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체사회가설 : 대표적으로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것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 ② 썩은사과가설 :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았다.
- ③ 구조원인가설 : 신입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 ④ 전체사회가설 :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로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정답) ③

| 구분 | 설명 |
|--------|--|
| 전체사회가설 | 1. 미국 시카고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윌슨이 내린 결론으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본다. 2. B지역은 과거부터 지역주민들이 관내 경찰관들과 어울려 도박을 일삼고, 부적절한 사건청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아무도 이를 문제삼지 않던 곳이었다. 이러한 B지역에 새로 발령받은 신입경찰관 A에게도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도박을 함께 하게 되는 경우 전체사회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
| 구조원인가설 | 1.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이다. 2. 신참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 |

| | |
|---------------------------|--|
| | <p>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p> <p>3. 정직하고 청렴하였던 신입 경찰관 A가 자신의 순찰팀장인 B로부터 관내 유흥업소 업자들을 소개받고, 이후 B와 함께 활동을 해가면서 B가 유흥업소 업자들로부터 상납금을 받는 것을 보고 점점 그 방식 등을 답습하였다면 ‘구조원인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p> |
| <p>썩은 사과가설</p> | <p>1.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p> <p>2. 경찰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적 성향에서 찾는다는 특징이 있다.</p> |
| <p>미끄러운 경사로 가설</p> | <p>1.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p> <p>2. 서면 등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엔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가설이다.</p> <p>3. 이러한 서면의 견해에 대하여 펠드버그는 경찰공무원은 작은 호의와 부패를 구분할 수 있는 윤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한다.</p> <p>4. 텔라트르는 펠드버그가 주장한 ‘작은 호의의 허용’에 대하여 이를 다시 비판함으로써 서면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p> <p>5.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A는 순찰 도중 동네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음료수를 얻어 마시면서 친분을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폭행사건처리 무마 청탁을 받고 큰돈까지 받게 되었다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의 한 예로 볼 수 있다.</p> |

3. 다음 보기 중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찰의 조직법적·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 졌으며,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동영역이 축소되었다.
- ㉡ 비경찰화 작용의 일환으로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였고, 정보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 ㉢ 1946년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여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와 여성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 ㉣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의 민주화 개혁에 성공하였다.
- ㉤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이념 및 제도에 민주적 요소가 도입되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③

- ㉡ 비경찰화 작용의 일환으로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였고,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정보과(사찰과)가 신설되면서 정보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 ㉣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의 민주화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중앙경찰위원회 제도는 실패한 제도이다.

4. 다음 보기 중 안전행정부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할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 국가공무원법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5. 다음은 경찰공무원 징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 ②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③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④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정답) ①

- ② 경찰공무원법 제26조(징계위원회)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③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6.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밀엄수의 의무’에서 비밀의 범위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직결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
- ② ‘거짓보고 금지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 ③ 「국가공무원법」상 ‘종교중립의 의무’는 신분상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 의무에 속한다.
- ④ 「경찰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된다.

정답) ④

성실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다음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면 당해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정답) ②

- ①·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등)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8. 다음 중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보호구역은?

- ① 통제구역
- ② 통제지역
- ③ 제한지역
- ④ 제한구역

정답) ④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 (보호구역) ① 규정 제30조의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 ② 규정 제30조의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③ 규정 제30조의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9. 다음은 '범죄 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이 범죄 행동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서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 ③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범행의 기술'이다.
- ④ 로버트 셉슨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정답) ③

범행의 기술은 Joseph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의 4대 요소에 해당한다. Sheley가 주장한 범죄의 4대 요소에는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heley는 범죄의 4대 요소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하여, 4대 요소가 모두 갖춰진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4대 요소가 동시에 상호작용을 해야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10. 다음 보기 중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지역경찰의 근무종류와 그 업무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행정근무 -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 ㉡ 상황근무 -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 ㉢ 상황근무 -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 ㉣ 순찰근무 - 주민여론 및 범죄정보 수집
- ㉤ 경계근무 -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④

①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는 상황근무에 해당한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행정근무)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서의 접수 및 처리
2. 시설·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3.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4. 기타 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상황 근무) ①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2.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3.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 4.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 5. 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

11. 다음은 다중범죄 진압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다중범죄의 특성으로는 부화뇌동적 과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이 있다.
- ㉡ 진압의 3대원칙으로는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가 있다.
- ㉢ 진압의 기본원칙 중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이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차단·배제이다.
- ㉣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전이법이다.

정답) ㉣

지문의 내용은 경쟁행위법에 대한 설명이다. 전이법이란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12. 다음 보기 중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이 있다.
-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제10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③

- ㉣ 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 청원경찰법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안전표지’는 무엇인가?

- ① 주의표지
- ② 규제표지
- ③ 지시표지

④ 보조표지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 구분 | 내용 |
|------|---|
| 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
| 보조표지 |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14.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 합은?

| |
|--|
| < 제1종 보통운전면허 > ㉠ 승차정원 ()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 적재중량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총 중량 ()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
|--|

| |
|--|
| < 제2종 보통운전면허 > ㉣ 승차정원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

- ① 41 ② 45 ③ 48 ④ 51

정답) ③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 운전면허 |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 종별 | 구분 | |
| 제1종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15. 다음 중 정보의 분석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은?

- ① 전략정보, 기술정보

- ②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 ③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 ④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정답) ④

- ① 전략정보, 전술정보는 정보의 성질(사용수준)에 따른 분류이다.
- ②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는 정보의 대상을 중심으로 한 분류이다.
- ③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는 정보의 요소를 기본으로 한 부류이다.

16. 다음 보기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주최자'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며,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자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신고서의 보완 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

다.

17. 다음 보기 중 「국가보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
- ㉡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8. 다음은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②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2개월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보안관찰법 제3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보안관찰법 제6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 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찰법 제17조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③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9. 다음의 설명은 ‘범죄인인도원칙’ 중 어떤 원칙에 관한 것인가?

인도청구가 있는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

- ① 쌍방가별성의 원칙
- ② 특정성의 원칙
- ③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 ④ 상호주의 원칙

정답) ①

20. 다음 보기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자
- ㉡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 ㉢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경과한 자
- ㉣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①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자)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경과한 자)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教唆) 또는 방조(幫助)한 사람